

# 研究教授制導入, 그 필요성과 추진 전략

權 謙 一

(서울大 研究處長)

大學은 社會의 文化와 產業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더우기 다음  
世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大學의 역할은 再檢討되어야 하며, 급증하는  
社會의 要求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大學은 지금의 모습으로부터 탈바꿈하  
여 創意的 제도의 창안과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여기서는 大學의 研究  
活性화를 위하여 研究教授制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과 추진 전략을 생각  
해 본다.

## 1. 머리말

우리는 다가올 世紀에서 펼쳐질 새로운 文明  
과 產業構造에 자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大學의 位相을 재정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  
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大學에는 다양한  
분야가 共存하고 있고, 그 分野에는 대표적 연구자들이 내일의 生役으로의 꿈을 지닌 채 꾸준히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大學의 活動 狀況이 곧 내일에 펼쳐질 우리의 社會相과 직결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음 世紀는 선진국형 산업 구조와 문화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이라는 것은 오늘의 經濟成長 속도로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그에 相應하는 사회 형태에서 大學이 추구해야 할 이정표를 우리는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大學의 機能은 教育·研究·社會奉仕라고 강

조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우리 大學의 현실은 教育機能만이 제 구실을 했다고 표현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우리 大學이 불과 수십 년의 역사밖에 갖지 못한 데다 外的 與件으로 인해 제대로 成長하지 못한 데도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비교적 짧은 大學의 歷史 속에서도 오늘의 大學의 모습을 갖기까지에는 우리 國民들의 教育熱이 큰 力을 하였다고 장담할 수 있다. 그러한 教育熱이 뒷받침되어 짧은 역사 속에서도 大學의 教育(teaching) 기능만은 활발하였고 분야에 따라서는 國際的인 수준에 이른 곳도 있다.

한편, 大學의 또 다른 기능인 연구 활동은 여러 가지 與件이 성숙되지 못하여 빈약한 處地에 있었다. 이는 大學의 구성원인 교수의 자질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研究費나 研究施設에 정부나 大學이 투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던 데 그

原因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經濟成長은 꾸준히 이어져 社會 여러 분야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제 모습을 찾아가게 되었고, 급기야 그늘진 大學에 대한 투자도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社會發展 속도에 힘입어 大學의 연구 분위기는 지난 수년간 많이改善되어 연구비의 규모도 커지게 되었고, 교육 차관 사업으로 연구 시설도 많이導入되어 연구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연구 여건이 나아지면 연구 활동 또한 활발해짐은 自明한 일이다. 이러한 때에 大學에서 성숙되기 시작하는 연구 분위기를 더욱 가속화시켜 하루 속히 大學의 연구 성과가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制度의 뒷받침을 검토한 것이 바로 研究教授制인 것이다.

## 2. 研究教授制 導入의 必要性

大學의 연구 기능이 활발해지면 大學은 社會發展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 다시 말하면 大學에서 얻은 첨단 지식이 社會 產業構造를 재편시키는가 하면 社會의 文化的發展 또한 大學이 先導하게 된다. 大學의 연구 기능을 어떻게 活性化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課題가 아니므로 本論壇에서는 그 研究機能을 어떤 制度로 能率化·效率化시키느냐 하는 문제만을 다루기로 한다.

'70년대 문교부의 학술 연구 조성비는 그 규모의 영세성이나 성격에 있어 후생적 차원을 넘지 못하여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꾸준한 經濟成長으로 많은 財團이 政府 차원이나 企業 차원에서 설립되었고, 연구비 규모도 차차 커지면서 본격적인 연구 활동이 지원되기 시작하였다. 또 外國 교육 차관에 의한 연구 시설의 확장도 꾸준히 지속되어 지난 수년간에 걸쳐 많은 最新 장비가 大學에 설치되었다. 따라서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어떤 分野는 선진국의 연구를 방불케 하는 정도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大學의 모습에서 우리의 밝은 將來를 전망해 본다.

더우기 요사이 產業界가 부닥치는 技術競爭의

돌파구를 大學에서 찾으려는 노력으로 產業體가 大學에 대규모 연구 용역을 주문함으로써 大學의研究活動은 企業發展에도 한 뜻을 하게 되었다.

大學의 연구 활동은 곧바로 大學院 교육과 직결된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우수한 학부 졸업생은 대부분 外國 유학을 선호하고 국내에서의 大學院 교육을 기피하였다. 이는 大學院 교육이 단순한 교육에 그치고 研究機能이 不實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사이 國內 大學院에는 우수한 학부 졸업생이 입학하고 좋은 연구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선진국 유학으로 인한 高級頭腦 유출이 어느 정도 문화된 점은 우리 大學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연구 여건이 모든 大學이나 모든 分野에 골고루 이룩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짧은 기간에 된 탓으로 部分的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지만, 종국에는 대학의 연구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요사이 社會가 요구하는 高級人力의 수급처가 바로 大學이고 產業이 필요로 하는 첨단 지식의 產室이 바로 大學이라는 認識이 확산됨으로써 大學의 연구 기능은 축진될 전망이다.

이제 이렇게 고조되는 大學의 연구 분위기를 制度의 우월성과 창의성으로 보다 가속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하루 속히 국제 경쟁력을 갖게 되고 나아가 學問分野마다 優位를 점하게 되는 날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그 한 가지 制度로서 우선 研究教授制를 도입하고자 한다.

## 3. 研究教授制의 問題點과 解決方案

研究教授를 研究專擔 교수나 研究所 勤務 교수와 구분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물론 研究專擔教授나 研究所勤務 教授가 研究教授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교수가 마치 강의나 대학원생 학위논문 지도는 못하는 것 같은 字句 해석이 있을 수 있다면 이는 바로 잡아야 한다. 즉, 研究教授는 연구를 위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원 강좌도 최소한으로 맡을 수 있으며,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 지도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전

담 교수나 연구소 근무 교수보다는 廣義로 定義되는 교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연구 교수란 연구를 전담하여 연구를 위주로 하되 그 소속을 반드시 연구소에만 국한하지도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學科 소속도 가능하도록 둔호를 개방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관련 분야에서 얻은 새로운 연구 결과가 大學院生에게 傳授될 수 있도록 강단에서 최소한의 大學院 강좌도 맡을 수 있도록 하며 학위 논문지도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研究教授의 定義가 불분명하면 연구 교수는 정부 출연 연구소나 일반 기업 연구소의 연구원과 구분하기 어렵게 될 소지도 있다. 또 현실적으로 연구 교수들이 연구소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대학원 강의를 맡을 수 없고 대학원생과 같은 연구 조원을 가질 수 없어 독자적인 연구에서 오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연구 교수로서 任用되는 경우에 닥칠 問題點을 노출시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方案을 모색함은 이 제도의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大에서는 이러한 研究教授制가 사실상 오래 전부터 극히 部分的으로 시행되어 왔다. 生藥研究所가 獨立機關으로 있으면서 독자적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당한 연구 시설을 갖추고 훌륭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生藥研究所 이외에 반도체공동연구소에도 연구 교수가 임용되었고(이 교수들은 學科 교수와 구분하는 정도의 명칭일 뿐 研究教授라고 指稱하고 있지 않다), 올해에는 유진공학연구소와 중앙교육연구전산원에도 교수 定員을 배정받았다.

이들 연구 교수가 지금은 연구소에 근무하게 되고 그 研究所의 특성에 맞는 研究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이 과연 연구소에만 근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연구 교수의 임용 절차에서부터 檢討해 보아야 한다.

즉, 연구 교수는 해당 연구소 단독으로 교수를 임용할 것인가 아니면 해당 분야 학과와 협의 내지 상호 인정 하에 임용하느냐에 따라 연구 교수의 역할과 活動範圍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연구 교수를 任用하는 절차를 研究所 단독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해당 학과와의 相補關係 내지 協助體制가 빈약해지고, 해당 학과와의 결충이 유효 적절하지 못하면 研究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研究教授制의 擴大 推進은 다른 研究 교수의 任用 방법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나타난 큰 問題點은 任用 과정과 研究助員 確保, 해당 학과 간의 연계 운영이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 대학 자체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못한 데서 오는 硬直性일 수도 있으나, 분야별 특수성이 偏極化되어 있는 현실도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의 슬기와 지혜로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야 연구 교수 제도는 자리를 굳히면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연구 교수의 선임 방법은 우선 연구소가 독립적으로 결정하기보다 관련 분야 또는 학과와 협의·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소가 필요한 분야를 제시하면 해당 몇 개 學科에 상의하여 우수한 教授를 공모하고, 다시 學科와 협의하여 특정 연구 교수를 선임하는 절차를 밟는다면 연구소와 학과간 또는 분야간 협력 체제는 훨씬 공고해질 것이 예전된다.

이러한 경우 그 연구 교수의 물리적 위치는 연구소라 하더라도 學科와의 協同 과정에서 최소한의 大學院 강의나 대학원생의 學位論文指導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연구소에서도 연구 조원 또는 연수 연구원(post-doc.)을 지원받게 되고, 연구소와 학과는

〈표 1〉 연구 교수의 신분·근무 조건·임용 절차에  
관한 여론 조사 결과 (단위: 명)

근무 조건	임용 절차	관련 학과 과 계				구 자 정	합 계
		관 련 학 과 계 결 정 소	학 과 의 一 연 구 결 정 결	동 연 구 결 정 결	관 련 학 과 계 결 정 소		
학과 소속/순환 근무	65	59	1	125			
학과·연구소 겸임 근무	23	70	1	94			
연구소 전임 근무	10	60	24	94			
합계	98	189	26	313			

\*자료: 서울大 김신복·서정현 교수의 조사 결과  
인용.

互惠 관계를 갖게 된다.

그러나 연구 교수의 任用 과정에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연구 교수와 학과 교수 간의 역할 분담 내지 연구 영역의 限界 등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다.

참고로 앞의 <표 1>은 연구 교수에 대한 신분 및 근무 조건, 신규 임용 절차에 대한 서울大 교수들의 여론 조사 결과이다. 이와 같은 여론 조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많은 問題點에 대한 해답의 일부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 4. 研究教授制의 推進戰略

時代의 요청에 의해, 또 大學의 올바른 位相으로의 轉移를 계기로 研究教授制가 시급히 擴大推進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교부가 제시한 大學教授 法定定員基準(<표 2> 참고)에도 못미치는 오늘의 현실에서 연구 교수제導入에 따른 몇 가지 推進戰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文教部 입장에서는 현재 定員令에도 못미치는 大學體制 속에서 研究教授制度를

적극 추진한다는 것은 시기 상조일 것이다. 이 것은 오늘날 대학이 아직도 法定定員數에도 못미치는 대학 교수로 大學을 운영하고 있는 불가피한 現實을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研究教授制度를 모든 大學 또는 모든 分野에 성급히 시행하기보다는 國策의 으로 시급한 分野 또는 研究所에 우선적으로 配定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私立大學의 경우, 財團에서 연구 교수를 임용하기 어려운 財政的 處地라면 研究費 또는 어떤 基金에 의하여 지원하는 연구 교수 임용도 하나의 전략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략은 이미 延世大가 선경 재단으로부터 받은 기금으로 연구 교수 아닌 基金教授 임용으로 부족한 교수를 충원하고 있음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진행법’ 시행령에는 이와 같은 연구 교수를 지원할 수 있는 法的 根據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自然系 연구 교수에 해당되겠으나, 自然系 이외의 分野에도 같은 戰略을 善用하면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표 2> 대학교수 법정 정원 산출 기준

구 분	법 정 정 원 기 준
기 본 정 원	총장, 부총장, 학장, 대학원장, 처장 외 1학과 9인— 2학과 18인— 3학과 26인— 4학과 33인— 5학과 39인— 과별 부교수 이상 4명 포함
학과수초과	5학과 이상시 학과당 5인
학생수초과	학과당 학생 정원 160명이면 40명당 1인
학과계열별	자연과학계 학과는 학과당 4인 예·체능계 학과는 학과당 3인 상·수·자리·역사계 학과당 2인 의학·한의학과는 교과목당 2인, 학생 160명 초과는 매 10명당 1인
조교	자연과학계 학과는 교수·부교수 1인당 1인, 기타는 학과당 1인
대학원교원	전공당 3인(부교수 이상 2인 포함)
교직과정담당	2인, 학생 수 200명 이상이면 3인

## 5. 結 語

짧은 大學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大學의 位相을 研究하는 大學, 社會에 공헌하며 社會發展을 先導해 나가는 大學의 모습으로 탈바꿈함에 있어 研究教授制의 導入과 擴大 推進은 시의 鉅烈하다고 본다.

이미 文教部가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目的에 부응하는 교수 정원을 配定하였다는 사실은 좋은 始發點이라 볼 수 있다. 물론 配定人員의 영세성은 우리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進一步한 제도적 출발은 無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

어떠한 制度의 改善에는 많은 副作用과 문제점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 研究教授制 또한 그任用, 役割, 領域限界 등 술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나, 發展하는 社會 要求에 부응하고 새로운 社會相 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도라면 우리는 과감히 이 제도를 수용·발전시켜야 한다.

先進國에서는 이미 이러한 制度가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가 그 나라 文化圈에서 탄생된 것을 그대로 모방 내지 活用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實情과 大學 與件에 맞도록 制度化시켜야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制度만이 새로운 產物을 만든다고는 생각지 않으나, 大學의 올바른 位相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발전시키려는 研究教授制가 하루 속히 定着되어 다양화되어 가는 社會變化를 능동적으로 수용·발전시키는 데 一翼을 담당하도록 한다면, 우리의 大學도 世界水準으로 進一步할 것이 틀림없다.

\*